

특 집

양계산업발전
이렇게 해야한다

民主化時

한반도에 개화의 물결이 밀어닥친 것이 100년전의 일이다. 그 개화는 주변정세의 파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힘보다는 타의와 타력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비운의 역사를 맞본 것이다. 지금 20세기 말기는 다시 국제적인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다. 이번에는 100년전과는 달리 자의와 자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식의 개화와 국력의 신장을 통하여 국제화의 파고를 타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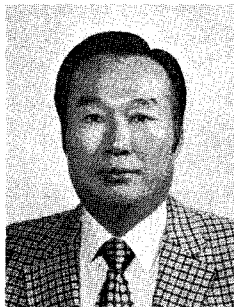
-민주화의 거센 물결-

우리는 현재 국제화 속의 민주화 물결에 거세게 휩싸여 있다. 지난 40여년간 그렇게도 갈망해 오던 민주화가 이제는 금방 손에 잡힐듯한 거리에까지 와 있다는 느낌이다. 전세계는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려 하고 있다.

민주화의 내용은 사실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닌데도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슨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해 나가는 것이 민주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민주화는 물론 경제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 교육의 민주화 등 모든 부문의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100년전의 개화도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정치체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특정인을 위한 비합리적이며 불평등한 것이었기에 개화를 통하여 근대적인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과 하, 지배와 피지배, 관료와 백성 등의 주종관계를 청산하고 주권재민을 실현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중은 국민으로서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에 민주화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이번 민주화는 반드시 꽃피워야 할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의 쓰라린 경험과 노력의 결과로 절대다수의 국민의지가 민주화를 바라고 있으므로 잘 될 것 같다. 정치민주화의 일정은 이미 잡혀 진행중에 있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사갈등의 회오리바람도 한차례 지나



박 영 인
USFGC 한국지부 회장

代의 양계인意識

갔다.

기타 모든 분야의 민주화도 착실하게 제대로 거쳐야 할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바람은 앞으로 지속되어 21세기의 선진한국을 만드는데 꼭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양계산업 민주화와 양계인 -

민주화시대의 양계산업도 당연히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산업민주화, 농업민주화, 축산민주화와 명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민주화되는데 양계산업만 민주화 이전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산업은 상대적으로 쇠퇴하여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양계산업민주화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민주화란 정치적인 개념이지 산업에도 과연 적용되는 것인가? 직선제 대통령이 주관하는 정부의 산업정책이면 그것이 곧 산업민주화의 길이 아닌가? 등등 산업민주화

에 대한 의문은 꽤나 많을 수도 있다.

양계산업민주화란 "양계산업의 농민주도화" 를 일컫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양계인이 주체가 되어 양계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산업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양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립되려면 계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및 그와 관련된 생산자재의 공급과 생산품의 가공 그리고 수급과 가격정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정부나 관련산업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양계인의 주체가 되어 조정 발전해 나아가는 산업형태를 뜻하는 것이다.

한국양계산업은 그동안 많이 성장해와 이제는 계산물 총생산의 약 60%가 1만수이상 사육하는 1,500양계인에 의하여 생산될 만큼 기업화되어 있다. 말만 1차산업이지 사실은 2차산업의 중소기업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종사자인 양계인 대부분이 농업에 바탕을 두었거나 아직도 농민적 사고의 범주에서 안주하고 있는 고로 자본주의체제하의 기업인 자세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민주화를 지향하는 경험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민주적양계산업이 형성되려면 최소한 다음 두가지 요건에 대한 양계인의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첫째는 양계장 안의 생산성향상이고, 둘째는 양계장 밖의 산업안정이다.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달성되지 않을 때 계산물은 품질, 위생, 수급, 가격상의 불협화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나아가 산업발전은 저해받게 된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주체가 바로 양계인이어야 하는 것이다.

양계인은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구실을 해야 한다. 농장주인인 동시에 산업주인으로써의 기능과 임무를 모두 충실히 할때 양계민주화는 가능하게 된다. 농장주인의 기능을 케어리하는 양계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주인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양계인은 보기 드물다. 하나는 나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일 같이 여기고 있다. 이래서는 민주화가 안된다. 양계인은 農場人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産業人으로 산업안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국가 없는 국민이 없듯이 양계산업 없는 양계인은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또 실천에 옮겨야만 양계산업의 민주화가 이뤄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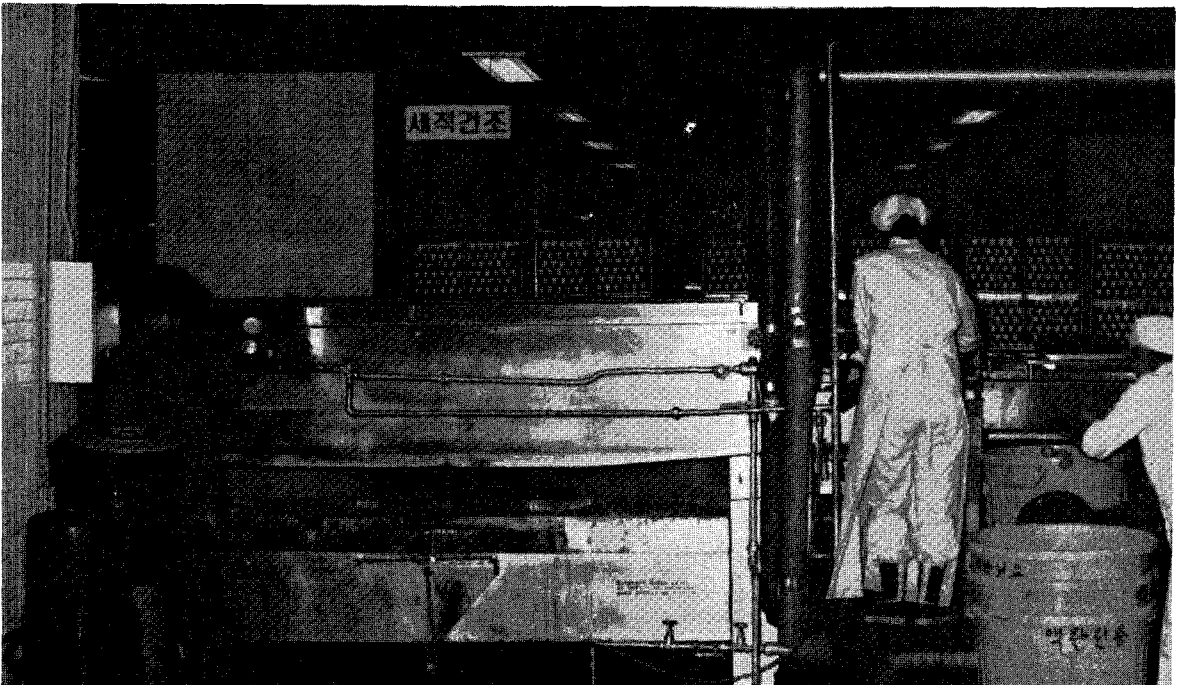
는 것이다.

- 치료할 수 있는 발육정체증 -

한국양계산업은 지난 10년사이에 예상했던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농장의 개별 생산성은 그런대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데 산업전체규모가 별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산물가격은 상대적으로 싼데도 그 소비는 기대한 것처럼 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현재 소비수준인 닭고기 3.1kg (일본12.2kg, 대만19.7kg) 계란 145개(일본241개, 대만 185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식성이나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계산물을 특별히 기피하는 관습도 없다. 더구나 최근의 성인병 문제는 세계적으로 적육(쇠고기, 돼지고기 등)보다는 백육(닭고기, 생선 등)을 더 먹게 하고 있지 않나. 한국의 계산물소비저조와 양계산업의 정체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양계산업발전의 정체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적절한 대응방안도 수없이 나왔다. 그 중요한 것을 보면

1)생산기술, 2)생산자재공급, 3)계산물유통, 4)계산물 상품화, 5)수급 및 가격, 6)소비, 7)정책분야에 걸쳐 매



우 다양하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특수성으로 보아 이러한 모든 방안들은 구조적개선-계열체계와 자구대책-자조금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어쨌든 당면하고 있는 양계산업의 정체증은 양계인의 의지여하에 따라 충분히 치유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보인다.

양계산업을 현대화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산업조직의 계열체계화에 있다고 본다. 계열화란 1차산업 종사자인 양계인과 양계관련 2·3차산업 종사자 사이에 기능적 연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대산업이 지향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품질의 향상, 수급의 조절, 가격의 안정, 정당한 배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영체계인 것이다. 이때의 2·3차산업 종사자(계열주체)는 양계연관산업 또는 협동조합이 되어 양계인(생산주체)과 계약을 맺어 계열사업을 수행한다. 양계산업은 계열화하지 않고는 현대산업대열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는 운명적 산업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조금은 양계산업의 민주화를 뒷받침하는 산업기금이다. 민주화는 모든 사람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양계산업의 민주화에 있어서도 양계인 전체가 경영규모에 비례하여 민주기금을 부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금은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은 물론 소비홍보에도 쓰여져 산업민주화를 실현케 한다.

-누구의 명예이던가; 무임 편승은 민주화에 역행-

한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목숨만을 귀중히 여긴 나머지 전생태에 나가려 하지 않고 각자의 돈만이 아까워 탈세를 일삼는다면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양계산업과 양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계인은 산업을 방어하고 산업발전기금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민주화시대의 양계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국가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여러기관이 있어 국사를 운영한다. 양계산업에도 산업수준의 조직이 있어야 산업적인 공통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다. 이 조직은 양계와 관련된 이익집단이며 양계인의 공존기구여야 한

다. 경제조직으로는 협동조합, 산업조직으로는 생산자협회가 있을 수 있다. 이들 조직으로 하여금 양계인의 농장밖 일을 전담케 하여 산업과 농장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양계산업의 조직은 정부나 다른 누가 해주지 않는다. 양계인 스스로가 조직하여 공동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때에 양계인은 조직의 정책결정(입법에 해당)에 참여하고 운영(행정에 해당)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판정(사법에 해당)은 제3자가 하면 된다. 조직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당연히 양계인이 부담해야 한다.

산업조직은 조직구성원의 명예다. 국가의 명예는 국민이 지듯이 양계산업의 명예는 바로 양계인이 져야 한다. 저혼자만의 명예인 농장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모두의 명예인 산업조직에는 무관심하다면 이는 민주화시대의 양계인자세가 아니다. 식민지시대 또는 독재시대의 못사는 농민태도라 할 것이다. 더구나 명예는 남이 지게 하고 저는 그에 편승이나 하려 하는 양계인이 있을 때 양계산업의 민주화는 이뤄질 수 없다.

민주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또는 의무적 참여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주화시대의 양계인은 자조금을 부담하고 자기시간의 10%쯤은 산업의 조직적인 활동에 쓸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산업안정에 협력하고 농장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명예는 부담인 동시에 반드시 더 큰 보수를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인 것이다.

한국의 양계산업은 바야흐로 민주화시대의 양계인 주도적산업으로 정착되어야 할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에나 의지하고 남이 명예를 저주기만을 기다린다면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계산물 가격의 곤두박질,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공급, 상대적인 소비저조, 투기성이 강한 생산, 산업의 불안정 등 문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마침내 외국의 계산물에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계인은 모름지기 개방화와 민주화시대를 맞아 산업의 자주성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한반도가 100년전에 개화의 물결을 탔듯이 오늘의 양계인도 공존공영하는 의식의 개화에 박차를 가하여 민주화대열에서 제쳐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양계**